

미·중 경제관계 변화 및 향후 전망

- ◆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 이후 무역 등을 매개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다가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제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갈등을 수반하는 경쟁관계로 변화
- ◆ 이같은 관계 변화속에 중국은 미국의 제1위 수입상대국 및 채권국, 미국은 중국의 제1위 수출상대국 및 채무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양국간에는 무역불균형 및 위안화 절상, 해외자원 확보, 지구온난화, 중국내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요소가 잠재
- ◆ 그러나 이러한 갈등요소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의 밀접한 연관관계, 다자간 채널을 통한 글로벌 이슈 해소, 중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계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미·중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1. 미·중 경제관계 변화

-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 이후 무역, 자본이동, 인적교류 등을 매개로 비교적 단기간에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로 발전
- 그러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양국의 협력관계는 갈등을 수반하는 경쟁관계로 변모

(협력관계 : 1979년~2000년)

□ 1979년 미·중 수교*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형성

* 중국은 1978.12월 제11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덩소핑이 실권을 굳히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 출발이 1979.1월 미국과의 국교 수립임. 이후 동년 7월 경제특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제정하면서 대외개방을 본격화

- 1980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화교권, 사회주의 국가 등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던 중국의 수출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확대*되기 시작

* 중국의 총수출(홍콩 제외)중 유럽 및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중 32.7%에서 1990년 40.9%로 상승

- 미국의 혜택 부여는 중국을 우방국으로 만들어 **소련을 견제하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

□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양국간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1991년 소련 해체와 1992년 덩소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짐**

* 덩소핑이 1992.1.18~2.22일중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시찰하면서 1989년 천안문 사태와 1991년 소련 해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재천명한 담화

- 소련 해체에 따른 냉전체제 붕괴는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유인**을 제공
- 한편 중국은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대외에 공표하여 **미국의 신뢰를 확보**

□ 2000.9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교역국으로 승인하여 **영구적인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부여**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는 미국이 교역국에게 영구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는 의미. 미국은 1974년 제정한 '잭슨 베닉법'에 의해 교역상대국의 인권, 환경 등을 고려해 매년 최혜국 자격을 심사하고 있지만 PNTR 교역국으로 승인되면 이러한 절차가 생략됨

1979년~2000년 미·중간 주요 사건

시 기	주 요 사 건
1978.12월	· 덩소평(鄧小平) 복권, 개혁개방 추진
1979. 1월	· 미·중 국교수립
7월	·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정(경제특구 설립 근거법)
1980. 1월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지위 부여
1989. 6월	· 천안문 사태
1991.12월	· 소련 해체
1992. 2월	· 덩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1997. 9월	· 장쩌민 미국 방문, 미·중관계를 '건설적·전략적 동반자 관계(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로 정의
2000. 9월	· 미 의회, 중국에 대해 영구적인 최혜국대우의 지위 부여

□ 동 기간중 중국의 대미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하고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도 1990년대 초반부터 급증**

○ 중국의 대미수출은 1980년중 10억달러에서 2000년중 521억달러로 50배 이상 늘어난 반면 대미수입은 38억달러에서 224억달러로 6배 정도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무역수지가 1980년중 28억달러 적자에서 2000년중 300억달러 규모의 흑자로 전환(미국측 통계는 26억달러 적자에서 838억달러 흑자로 전환*)

* 이같은 차이는 미국측 통계가 원산지 기준으로 작성되어 홍콩 등을 경유한 중국제품이 포함되는 데 반해 중국측 통계는 대미 직접 수출분만 집계되기 때문에 발생

1990년~2000년중 미·중간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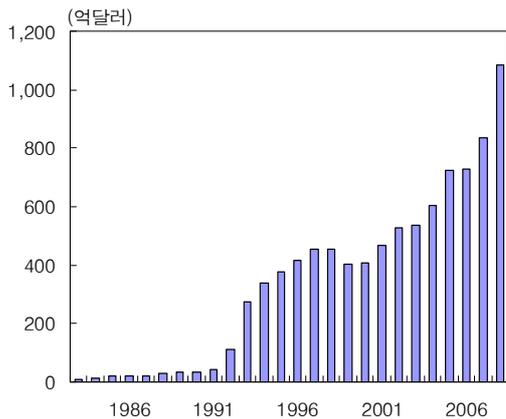
(억달러)

	중국측 통계			미국측 통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1980(A)	9.8	38.3	-28.5	37.5	11.6	25.9
1990	51.8	65.9	-14.1	48.1	152.2	-104.1
2000(B)	521.4	223.6	297.8	161.9	1,000.2	-838.3
B-A	511.6	185.3	326.3	124.4	988.6	-864.2

○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이전 연평균 3~5억달러 수준에서 1993년 이후에는 매년 20억달러 이상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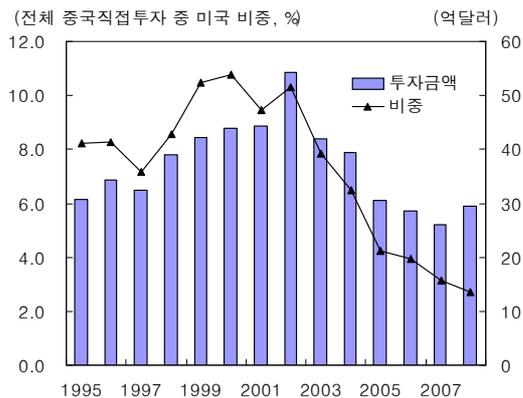
— 중국으로의 직접투자 총유입액도 연 50억달러 미만에서 1993년 이후 매년 200억달러 이상으로 큰 폭 증가

외국인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자료 : CEIC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자료 : CEIC

(경쟁관계 : 2001년 이후)

□ 2001.11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은 갈등을 수반하는 경쟁 관계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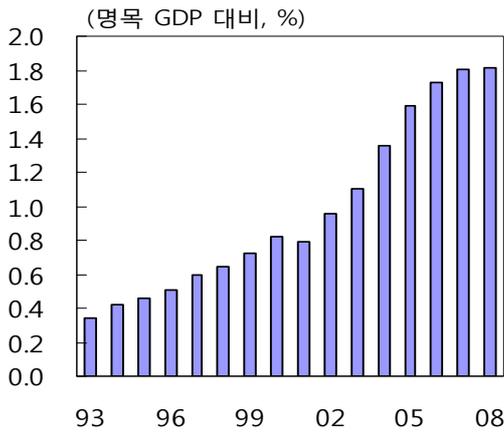
○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WTO 가입으로 국제사회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미국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시작

* 2001년중 경제규모(명목GDP 기준) 순위 :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영국, 5위 프랑스, 6위 중국, 7위 이탈리아

- 특히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점차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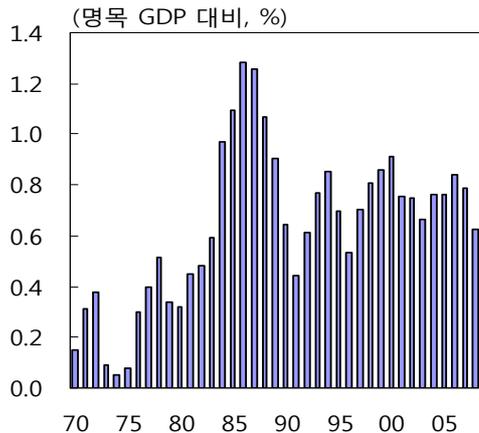
— 중국의 WTO 가입 직후인 2002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비율(GDP대비)이 플라자합의 직전의 대일본 무역적자 비율(1.0%)을 상회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비율



자료: 미 상무부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비율



자료: 미 상무부

— 이처럼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 및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

- 이에 대해 중국은 2002년말 적격 외국인 투자자제도(QFII)*를 도입해 B주시장(외국인 전용)에만 허용되던 외국인 투자를 A주 시장(내국인 전용)으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QFII 제도 내용 및 현황'

- 2005.7월에는 미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여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을 유도

□ 양국간 경제 현안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006.12월 고위급 전략경제 대화(SED ;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처음 개최

- 2008.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된 SED에서는 무역불균형 해소,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거시경제협력 등이 주된 의제로 논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전략경제대화(SED), 전략 및 경제대화(S&ED) 연혁 및 주요 의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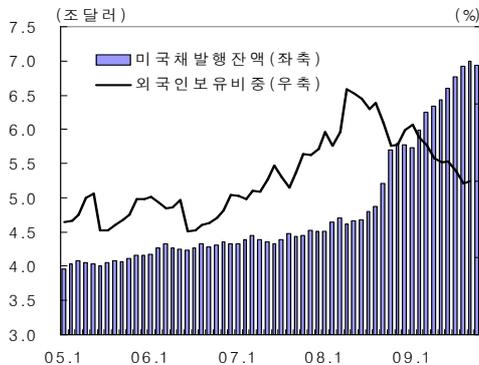
- 한편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동안 공세적 입장이었던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더욱 확대

- 2009.10월 현재 중국은 7,989억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하여 전체 외국인 보유액중 22.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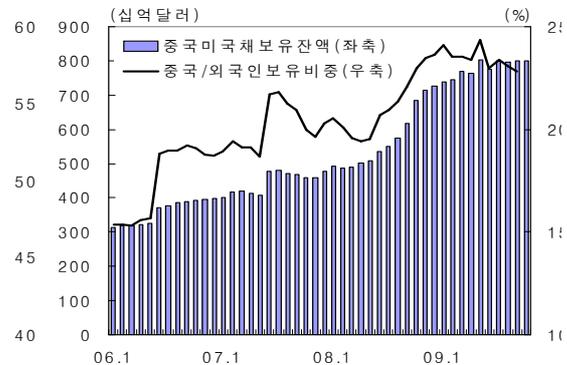
* 중국은 미 국채 이외에도 Freddie Mac, Fannie Mae 등에 거액을 투자 (Moody's는 2008.7월 현재 3,700억달러로 추정)

미 국채 규모 및 외국인 보유



자료 : 미 재무성, SIFMA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



주 : 1) 외국인 보유 대비 비중
자료 : 미 재무성, SIFMA

-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하거나 매입 규모를 줄일 경우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이 과거처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중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을 높여가고 있음

○ 2009.4월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국제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IMF의 개혁을 주장

□ 이같은 위상변화에 따라 2009.7월에는 SED와 고위급대화*(SD ; Senior Dialogue)를 통합하여 경제와 정치·안보 분야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 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한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 Strategic & Economic Dialogue)를 개최

* 미·중간 차관급 정치·안보 분야 협의체로 2005.8월부터 2008.12월까지 5차례 개최

○ S&ED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하였으나 G-2체제*의 실질적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부에서는 미중간 경제력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중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중국을 과대 평가하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2010.10.22일 The Economist, 'The odd couple')

2001년 이후 미·중간 주요 사건

시 기	주 요 사 건
2001. 1월	· 부시 정권 출범,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Strategic Competition)'로 설정
9월	· 9.11 사태 발생
10월	· 부시 정권, 미·중관계를 '건설적 협력관계(Constructive and Cooperative Partnership)'로 재설정
12월	· 중국의 WTO 가입
2002.12월	· 중국, 적격 외국인 투자자제도(QFII) 도입
2005. 7월	· 중국, 통화바스켓제도 도입
2006.12월	·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개최
2008. 9월	· 리먼 브러더스 부도
2009. 4월	· G-20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긍정적, 협력적, 포괄적 관계(positive,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relationship)'로 정의
2009. 7월	· 전략경제대화(SED)를 전략 및 경제대화(S&ED)로 격상

2. 미·중 경제관계 현황

- 그동안 미·중 경제관계 변화로 중국은 미국의 제1위 수입상대국, 최대 무역적자국 및 채권국*으로, 미국은 중국의 제1위 수출상대국, 제2위 무역흑자국 및 최대 채무국*으로 부상

* 미 국제 보유 기준으로 평가

- 다만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는 무역, 국제투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이러한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는 중국이 경제규모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

* 2008년중 중국 명목GDP가 상향조정된 데다 2009년중 중국은 8% 성장을, 일본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2009년중 중국의 명목GDP가 일본을 앞서 세계 제2위로 부상한 것으로 추정(China Daily, 2009.12.26일)

(수출입)

- 2009.1~9월중 미국의 對중수입은 2,192억달러(미국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5.6%)로 캐나다를 제치고 1위로 부상

미국의 국별 수입 규모

(억달러, %)

2008년			2009.1~9월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캐나다	3,680	14.6	중국	2,192	15.6
중국	3,478	13.8	캐나다	1,804	12.8
멕시코	2,358	9.3	멕시코	1,374	9.8
일본	1,660	6.6	일본	847	6.0
독일	1,318	5.2	독일	763	5.4
아프리카	1,203	4.8	영국	640	4.5
영국	1,035	4.1	아프리카	482	3.4
계	25,225	100.0	계	14,072	100.0

자료 : 미 상무부

- 품목별로는 기계류(24.0%), 전자제품(23.2%), 섬유류(11.3%) 등이 對중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미국의 국가별·품목별 수입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중국의 품목별 對미수출 통계로 파악

중국의 품목별 對미수출 비중

		2008		2009.1~11월			
						(%)	
		2008	2009.1~11월	2008	2009.1~11월		
기계류	21.8	24.0	화학제품	3.5	3.1		
전자제품	23.1	23.2	운송장비	3.8	2.9		
섬유류	9.2	11.3	광학·음향장비	2.5	2.6		
고무·목재·피혁	7.4	7.5	농산품	2.0	2.1		
시멘트·금속	9.9	7.2	광물	1.1	0.4		
신발·우산	4.4	4.8	기타	11.3	10.9		

자료 : CEIC

- 한편 2009.1~9월중 미국의 對중수출은 582억달러(미국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5위를 기록

미국 국별 수출 규모

2008년			2009.1~9월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캐나다	3,082	16.9	캐나다	1,809	15.9
멕시코	1,752	9.6	멕시코	1,083	9.5
영국	1,159	6.3	영국	737	6.5
일본	1,064	5.8	일본	680	6.0
중국	855	4.7	중국	582	5.1
독일	826	4.5	독일	499	4.4
네덜란드	542	3.0	네덜란드	339	3.0
계	18,266	100.0	계	11,631	100.0

자료 : 미 상무부

- 품목별로는 전자제품(15.7%), 농산품(14.6%), 고무·목재·피혁(13.9%), 기계류(13.7%) 등이 주된 수출품목*

* 미국의 국가별·품목별 수출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중국의 품목별 對미수입 통계로 파악

중국의 품목별 對미수입 비중

	2008		2009.1~11월		(%)
	2008	2009.1~11월	2008	2009.1~11월	
전자제품	17.3	15.7	시멘트·금속	7.2	8.2
농산품	14.4	14.6	광학·음향장비	6.9	7.5
고무·목재·피혁	14.3	13.9	광물	2.5	2.4
기계류	14.8	13.7	섬유류	3.2	2.3
운송장비	8.3	10.9	신발·우산	0.1	0.1
화학제품	10.7	10.3	기타	0.3	0.3

자료 : CEIC

(무역수지)

- 2009.1~9월중 미국의 총 무역적자(미국측 통계)는 2,710억달러로 이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가 1,610억달러로 59.4%를 차지(2위 멕시코의 5.5배 수준)

미국의 국별 무역수지 규모

2008년			2009.1~9월			(억달러, %)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중국	-2,624	37.7	중국	-1,610	59.4	
아프리카	-807	11.6	멕시코	-291	10.7	
멕시코	-605	8.7	독일	-265	9.8	
캐나다	-598	8.6	아프리카	-218	8.0	
일본	-597	8.6	일본	-167	6.2	
독일	-492	7.1	이탈리아	-99	3.7	
이탈리아	-197	2.8	대만	-73	2.7	
계	-6,959	100.0	계	-2,710	100.0	

자료 : 상무부

- 2009.1~9월중 중국의 총 무역흑자(중국측 통계)는 1,362억달러로 이 가운데 對미 무역흑자가 1,028억달러로 75.5%를 차지(1위 홍콩과 비슷한 수준*)

* 홍콩 경유분을 감안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추정

중국의 국별 무역수지 규모

(억달러, %)

2008년			2009.1~9월		
국가	금액	비중 ¹⁾	국가	금액	비중 ¹⁾
홍콩	1,778	60.2	홍콩	1,082	79.5
미국	1,709	57.8	미국	1,028	75.5
네덜란드	406	13.7	네덜란드	217	15.9
영국	265	9.0	영국	165	12.1
이탈리아	150	5.1	싱가포르	81	5.9
싱가포르	122	4.1	이탈리아	66	4.8
러시아	92	3.1	프랑스	54	3.9
계	2,955	100.0	계	1,362	100.0

주 : 1)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국(미국 등)과 적자국(한국, 일본 등)의 흑자 및 적자규모 차이가 커서 전체 무역흑자규모에서 일부 흑자국의 비중이 높게 타나남
자료 : CEIC

(자본이동)

□ 2009.10월말 현재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잔액은 7,989억달러로 총 발행액(6조 9,357억달러)의 11.5%, 외국인 투자자 보유액(3조 4,981억달러)의 22.8%를 차지

○ 이는 중국 외환보유액(2조 2726억달러)의 35.1%에 해당하는 규모

⇒ 2008.9월 이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 부상

주요국의 미 국채보유 규모

(2009.10월말 현재)

(억달러, %)

국가	잔액	보유비중	
		전체	외국인
중국	7,989	11.5	22.8
일본	7,465	10.8	21.3
영국	2,307	3.3	6.6
석유수출국 ¹⁾	1,884	2.7	5.4
카리브지역 ²⁾	1,693	2.4	4.8
브라질	1,562	2.3	4.5
홍콩	1,420	2.0	4.1
러시아	1,225	1.8	3.5
룩셈부르크	908	1.3	2.6
대만	787	1.1	2.2

주 : 1)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군도, 파나마 등 카리브해 금융센터

2)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란, 이라크, 알제리, 가봉, 리비아,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자료 : 미 재무부

□ 2009.1~11월중 미국의 對중 직접투자는 22억달러로 전체 對중국 직접투자의 2.9% 수준에 불과

○ 1995년 이후 누적액 기준으로도 미국은 540억달러로 전체 8,796억 달러의 6.1% 수준

주요국 對중국 직접투자 규모

(억달러, %)

2008년			2009.1~11월			1995~2009.11월		
국가	잔액	비중	국가	잔액	비중	국가	잔액	비중
홍콩	410	37.9	홍콩	386	49.5	홍콩	3,285	37.3
버진군도	160	14.7	버진군도	99	12.7	버진군도	901	10.2
싱가포르	44	4.1	일본	39	5.0	일본	617	7.0
일본	37	3.4	싱가포르	31	3.9	미국	540	6.1
케이먼군도	31	2.9	한국	24	3.1	한국	430	4.9
한국	31	2.9	케이먼군도	23	3.0	대만	408	4.6
미국	29	2.7	미국	22	2.9	싱가포르	386	4.4
계	1,083	100.0	계	779	100.0	계	8,796	100.0

자료 : CEIC

□ 한편 중국의 對미 직접투자 역시 2008년중 4.6억달러로 전체 직접투자(559억달러)의 0.8%

3. 잠재해 있는 미·중간 갈등 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나 무역불균형 및 위안화 절상, 해외자원 확보, 지구온난화, 중국내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요소는 잠재

(무역불균형 및 위안화 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간 무역불균형이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큰 상황

- 2009.1~11월중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1,30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6억달러 줄어들고 1~10월중 미국의 총 무역적자도 3,04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69억달러 감소

- 다만 1~10월중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0%로 전년동기(36.8%)보다 오히려 상승

- 미국은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어야 하고 중국의 성장체제가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

- * 지난 10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위안화가 15~2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

- 이에 대해 중국은 저축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 Justin Yifu Lin 세계은행 economist는 미·중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위안화 환율조정보다는 미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중국의 저축률 하락 및 소비 증가를 위한 구조개혁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

- 특히 **위안화 절상요구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위안화가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절상되었다는 점, 중국과 미국간 제품경합도가 낮아 위안화 절상만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견지**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3>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의 반대 논리’ 참조

- 이처럼 무역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의견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양국간 무역마찰이 간헐적으로 발생**

-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WTO에 정식 제소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2009.9월)
- 또한 미국이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Pipe)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2009.11월)하자 중국도 미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12월)

(해외자원 확보)

- 그동안 미국은 **군사력 및 외교력을 바탕으로** 중동, 중앙아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메이저 기업을 앞세워** 세계 자원시장을 주도
- 반테러 명분으로 시작한 이라크 전쟁을 통해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카스피해 연안 산유국과의 유대관계도 강화
- 미국계 메이저 기업들은 풍부한 자금 및 기술, 정보력 등을 토대로 석유, 광물 등 세계 자원시장을 주도

— 엑슨모빌, 쉘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메이저 석유기업과 알코아(알루미늄 생산1위), 뉴몬트 마이닝(금생산 1위) 등 대형 광물업체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

□ 한편 중국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부국에 대해 인프라, 산업단지 건설 등과 같은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국영기업 등을 통해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

○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에 대한 투자 및 원조활동을 강화*

* 2005.1/4~09.1/4분기중 중국의 해외인수합병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종이 25.4%를 차지(Bloomberg)

**중국의 대개도국 투자 현황
(2002~2007)**

(억달러)

국가명	대중국 수출	투자·원조액	국가명	대중국 수출	투자·원조액
베네수엘라	원유	164	앙골라	원유	74
브라질	철광, 광석	82	콩고	원유, 광물	50
필리핀	광석, 구리	54	수단	원유	42
베트남	원유, 고무 등	34	가봉	원유, 광물	30
버마	목재, 광석	31	모잠비크	목재, 광석	24
에디오피아	원유 채굴권	20	적도 기니	원유	20

자료 : 미 의회, '중국의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원조활동', 2009.2.25

○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석유화학(SINOPEC) 등 3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

* 국유은행들은 이들 기업에 저리 및 무이자 등의 우대조건으로 용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이들 기업에 중국내 석유광구에서의 생산 및 판매권을 부여

○ 최근에는 해외자원 확보 및 대외자산 다변화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하는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금*」의 설립도 검토중

* 동 기금은 자원부국에 대한 대출, 중국기업의 해외 석유회사 지분 확보, 자원개발권 취득 등에 사용될 전망

□ 아직까지 해외자원 확보를 둘러싼 양국의 직접적인 마찰은 없으나 중국의 자원확보 전략이 핵확산 저지, 대테러 전쟁 등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중국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 수단 등과 자원개발 등을 위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UN에서 이란 핵개발 제재 움직임에도 소극적

* 미국은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

○ 중국은 미국의 핵확산 저지, 대테러 전쟁 등 대외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자국의 해외자원 확보 정책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

* 2009.11월 미·중 정상회담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후진타오 주석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지구온난화)

□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큰 상황

○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에 앞서 개최된 S&ED(2009.7월)와 양국 정상회의(11월)에서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사전합의에 실패

○ 12월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안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

* 중국은 동 회의전(11월) 2020년까지 GDP 단위기준당 온실가스를 2005년대비 40~4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강제력 있는 감축의무 부과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

— 이에 따라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채택에 실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4>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 참조

(중국내 인권문제)

□ 중국의 인권문제는 미국이 양국 수교 이후 꾸준히 거론해온 중국의 아킬레스건

- 미국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내 인권문제를 비판해 왔는데

2009.2월 발표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는 죄수들에 대한 탈법적 살인 및 고문, 티베트·신장 위구르 지역의 문화 및 종교 탄압,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치지도자들은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

*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해온 대표적 인물인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009.5월 중국방문시 민감한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을 자제. 11월 오마바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에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

□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이 중장대를 적용한다고 역공

- 중국은 「2008년 미국 인권기록*」(2009.2월)에서 미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 노숙자·마약중독자·자살자 증가, 백인에 비해 높은 흑인의 실업률 및 절대빈곤층 비율, 아동학대, 최대 무기수출국 및 이라크 전쟁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인권문제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

* 미국의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응해 미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10년전부터 발표

(글로벌 리더쉽)

- 미국은 중국을 G-2로 대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은 G-2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등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입장

* 원자바오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①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며 ② 독립, 자주, 평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 ③ 국제문제는 여러 국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G-2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2009.11월)

- 중국은 시장경제, 민주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대내외에서 증대될 가능성을 우려

—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패권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근 아시아 및 일부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FTA, 투자 및 원조 확대 등을 통해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4. 향후 전망

- 역사적으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rising power)할 때 초기에는 기존의 강대국과 경제·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에는 정치·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기존의 최강대국 미국이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 1800년대말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영국과 독일의 충돌(1,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자국의 근대화를 지원했던 미국과 일으킨 태평양 전쟁 등('Chimerica' is Headed for Divorce, Niall Ferguson, NEWSWEEK(2009.8.15))

- 구소련의 해체로 미국이 세계패권을 혼자 행사하던 단극시대(unipolar world)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다극시대(multipolar world)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미래는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

* 이전의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경제 및 정치에 있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음. 많은 전문가들은 2009.11월 오바마의 중국방문이 다극시대를 인정한 첫 걸음으로 해석

- 현재로서는 미·중간에 존재하는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나라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①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interlocking)되어 있어 협조와 양보만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양국 정부가 다같이 인식

- 무역불균형이 계속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2008.7월부터 위안화를 사실상 달러화에 페그시켰으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페그제를 철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예측기관들은 위안화 가치가 미 달러화에 대해 최대 연 4% 정도 절상될 것으로 전망

주요 투자은행 위안/달러 환율 전망

	전망 일자	현재 환율 ¹⁾	2010				2011
			3월	6월	9월	12월	
J.P. Morgan	12.04	6.83	6.75	6.70	6.65	6.58	..
Morgan Stanley	11.25		6.74	6.68	6.61	6.55	6.33 ²⁾
Citigroup	11.23		6.75	6.70	6.65	6.62	6.40 ³⁾
Barclays Capital	12.04		6.81	6.75	..	6.60	..

주 : 1) 2010.1.5일 기준 2) 2011.2/4분기말 기준 3) 2011년말 기준

—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

— 8,000억달러에 이르는 미 국채를 매각할 경우 중국의 대외자산가치가 크게 저하될 위험이 있어 이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

o 한편 미국도 국내적으로는 중국자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위안화 절상요구를 적절한 선에서 자제하는 등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② 글로벌 이슈를 다자간 협의채널을 통해 해소

o 지구온난화, 對테러전, 그린에너지 개발 등 글로벌 이슈를 미국과 중국의 G-2체제가 아닌 G-20, UN 등 다자간 협의채널을 통해 협의할 경우 두 나라간의 잠재적인 갈등과 충돌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

③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를 주도하기에는 이르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

○ G-2라는 개념이 표면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의 향후 발전방향, 미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미국과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정도로 중국이 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전체 경제규모, 1인당 GDP, 군사비 지출규모, 혁신적 개발능력 등 많은 측면에서 미국에 뒤처진다는 점을 인정

— 또한 중국은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족간 분쟁을 방지해야 하며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보다 큰 자유를 요구하는 민주세력도 통제해야 하는 등 국내문제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입장

→ 중국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global actor)가 될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같이 세계경제를 이끄는 리더(global leader)가 되기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되 협조와 양보를 통해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 일부에서는 양국의 충돌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군사 면에서도 최강국으로 부상하려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 목적*

*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2006년 CCTV를 통해 12부작으로 방영된 '大國崛起 - 강대국의 조건'에서 중국은 이러한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평가

- 중국은 경제나 군사력 면에서 미국에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나 반미 정서가 강한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leverage)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이 핵확산을 방지하려면 북한, 이란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파키스탄에 남아 있는 탈레반 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요

- 또한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반미 정서가 높은 지역에 자원개발, 경제원조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계속 축적하는 중

- 미·중간에 새로운 냉전(new cold war)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무역불균형과 같은 경제적인 갈등해소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중국의 국가전략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對 중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붙임 1>

QFII 제도 내용 및 현황

- 2002년 12월 외국인에게 중국 주식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적격 외국인 투자자제도(QFII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를 도입
 - B주시장(외국인 전용) 투자만 허용되던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A주시장(내국인 전용) 투자도 허용하는 제도

QFII 신청 자격 요건

주요 내용

- 금융건전성, 직원 적격성, 내부통제시스템 등 요건 준수
- 자산규모 요건
 - 자산운용사 : 5년 이상 영업, 운용자산 50억달러 이상
 - 보험회사 : 설립 5년 이상, 자본금 10억달러, 운용자산 50억달러 이상
 - 증권회사 : 30년 이상 영업, 자본금 10억달러, 운용자산 100억달러 이상
 - 상업은행 : 자산규모 세계 100대 이내, 운용유가증권자산 100억달러 이상

- QFII 자격은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투자 허가와 중국외환관리국의 투자 한도(최저 5천만달러, 최고 8억달러) 배정을 함께 받아야 효력이 발생
 - 총 투자한도는 도입초기 40억달러(2002.12월)에서 100억달러(2005.9월), 300억달러(2007.12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
- 2009. 6월말 현재 총 85개 기관이 QFII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스위스 은행인 UBS AG의 투자한도가 8억달러로 가장 큼
 - 한국금융기관도 푸르덴셜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 한화투신,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기관이 동 자격을 취득

<붙임 2>

전략경제대화(SED)와 전략 및 경제대화(S&ED) 연혁 및 주요 의제

- 미국과 중국은 양국 경제관련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 협의체로서 전략경제대화(SED :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2006년말부터 개최
 - 2006년 4월 후진타오 주석과 부시 대통령이 양국간 고위급 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9월 폴슨 미 재무장관이 우이 부총리와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2006년 12월 이후 2008년 12월까지 미국 측 재무장관과 중국 측 경제담당 부총리 주재하에 연 2회, 총 5차례 개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의 주요 의제

개최일시	주요 논의 사항
2006.12	무역불균형 해소,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무역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및 환경보호
2007. 5	시장접근 확대, 금융 개방, 에너지 안보 및 환경보호, 법치 강화
2007.12	무역 및 제품 안전성, 금융개혁,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변화, 환경보호, 양자간 투자, 기술 형식
2008. 6	거시경제 협력, 금융서비스, 제품품질과 식품안전, 에너지 및 환경 협력, 무역과 경쟁, 투자
2008.12	거시경제 협력,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환경 협력, 무역장벽 대응과 투자환경 개선, 제품 품질과 식품 안전, 국제경제협력

-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 북핵 사태 악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외에 외교안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의 SED와 고위급대화(SD ; Senior Dialogue)를 합쳐 전략 및 경제 대화(S&ED ; Strategic &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기로 합의

- 7.27~28일 열린 제1차 S&ED에서는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의 양국 최고위급 정책책임자들을 대거 참가하여 전략트랙과 경제트랙으로 나누어 의견을 교환

— 전략트랙에서는 북핵문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

-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지지를 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청정 에너지 개발 등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그러나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전 합의 도출은 실패

— 경제트랙에서는 균형성장, 거시정책공조 및 구조개혁,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

- 금융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내수 및 가계소비 확대를 주문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내수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및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

중국은 달러화 가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책임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 촉구하였으며 미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을 약속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은 금융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
- 양국은 더욱 개방된 국제 무역 및 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약속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균형성장을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G-20 등 주요 다자협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

<붙임 3>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의 반대 논리

□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 2009.11.26)는 미국 등 주요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대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

① 리만사태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 가치가 대폭 하락한 반면 위안화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008년초와 비교해 보면 위안화는 엔화를 제외한 대부분 통화에 대해 절상된 상태

② 중국은 그동안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global rebalancing에 상당부분 기여*

* 2009년중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2%p에 달한 반면 순수출은 -4%p로 추정되며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2007년의 11%에서 6%로 반감

③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시키기 시작하면 절상 기대로 인한 핫머니 유입으로 유동성이 급증할 가능성

— 절상 기대로 인한 핫머니 유입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시에 절상시킬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수출업계에 너무 큰 충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곤란

④ 중국과 미국 제품간 경합도가 낮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단지 수입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

⑤ 미국이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면서 다른 나라에 통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

□ 한편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위안화를 절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2009년 들어 수출이 14%나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주장

○ 수출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GDP 성장률이 1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초쯤 위안화를 절상시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붙임 4>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

- 2009.12.7~18일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
 -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향후의 세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회의의 주요 의제
 -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국가별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채택에는 실패
 - 산업화시대 대비 지구기온 상승폭은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내용이 없음
 - 2010년 1월까지 선진국은 2020년까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은 감축계획을 제시
 - 선진국은 2012년까지 300억달러의 긴급자금 개도국에 지원하고 2013~2020년중에는 매년 1,0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 지원받은 국가는 2년마다 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검증
 -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0.1월말까지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12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회의까지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언급

교토의정서와 코펜하겐 기후협약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기후협약
정식명칭	· 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내용	· 2008~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로 감축 · 중국이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고 미국은 기준을 거부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약이라는 평가	· 지구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시대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제한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 선진국은 2012년까지 300억달러,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자금을 개도국에 지원
참여정상	· 0명	· 105명